[칼럼] 왜 지금 칠레인가?②

헌법으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려는 칠레의 실험

-칠레의 사회개혁 요구 시위와 개헌 결정 -

박윤주(계명대 스페인어중남미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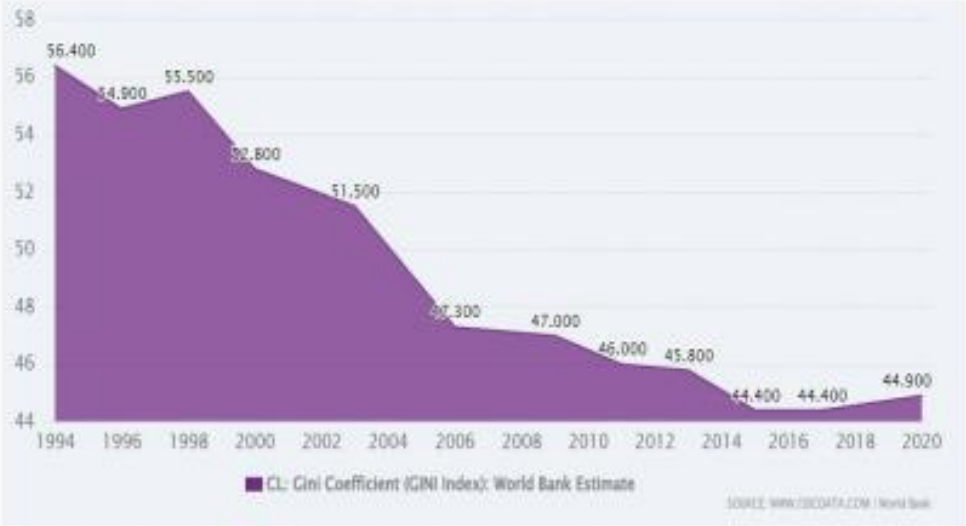
3회에 걸쳐 칠레의 사회 개혁 요구 시위와 그 뒤를 잇는 개헌의 노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칠레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있을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창궐하던 2019년 겨울, 남반구에 있는 칠레는 여름이었다. 그리고 칠레의 여름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공포가 아닌, 칠레 사회의 모순과 오랜 시간 이를 해결하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속된 칠레의 사회개혁 요구 시위는 그 참가 인원의 규모와 시위의 강도 덕분에 사회폭발(Estallido Social, Social Explosion)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전 세계 시민들이 코로나19의 공포 속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설 때, 칠레의 시민들은 칠레 전역에서 사회개혁을 요구하며 거리를 메웠다.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OECD 가입국이자, 신자유주의의 모델 국가로 칭송 받던 칠레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에 관한 뉴스는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다. 평소 라틴아메리카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우리 언론 마저도 칠레의 시위 소식은 비교적 여러 매체에서 다루었다. 시위를 촉발한 고등학생들의 지하철 점거 소식은 뉴스 포털에서 클릭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큼 흥미로웠으며, 특히 고작 30페소(2022년 4월 기준 한화 약 45원)에 불과한 인상 폭에 전국이 들고 일어났다는 다소 자극적인 머리기사는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 많은 사람이 고작 우리 돈 45원에 분노하게 된 사연이 궁금했던 것이다.

▲ 사람은 상품이 아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칠레 사회개혁 요구 시위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지하철 요금인상과 그에 반대하는 지하철역 점거 사태로 촉발되었으니 경제적인 불만을 시위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결정이었다. 게다가 라틴아메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지역으로 손꼽는 곳이니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OECD 국가마저 극복하지 못한 라틴아메리카의 고질적 불평등으로 사회개혁 요구 시위를 설명하는 글들은 타당해 보였다. 하지만 정말 칠레의 불평등이 악화하였을까?

세계은행에 따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불평등의 정도를 수치화한 지니 계수의 추이를 비교해보면 칠레의 불평등은 1990년대에 비하여 2000년대에 들어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는 20여 년 넘게 정권을 잡았던 칠레의 중도좌파 정부가 실행한 불평등 완화 정책의 성과였다. 물론 여전히 44.9에 달하는 지니 계수는 칠레 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불평등을 사



〈그래프 1〉 칠레의 지니계수 변동(1987-2020)

출처:CEICDATA/World Bank

회폭발이라고까지 불리는 대규모 사회개혁 요구 시위의 원인으로 지목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특히 칠레의 불평등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2019년에 칠레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을 불평등에서 찾는 것이 설득력 있는 주장일까? 불평등은 칠레 사회에서 변하지 않는 상수였고, 심지어 소폭이나마 개선되고 있었다면 불평등만으로는 2019년 칠레 시민들의 분노를 설명하기 어렵다.

사회개혁 요구 시위는 일종의 사회운동이며, 사회운동은 불만을 통하여 촉발되고 그 불만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려가면서 성장한다. 사회운동은 그래서 불만을 촉발시킨 대상에 대한 투쟁이라기보다는 불만에 아직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불만을 공유하고 이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을수록 사회운동은 성장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유리하다. 투쟁은 투쟁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투쟁을 통하여 투쟁의 대의에 공감하는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사회운동에 유용한 것이 된다. 이 틀에서 살펴보면 칠레의 사회개혁 시위는 매우 성공적인 사회운동이었다.

물론 지하철 요금의 인상은 많은 칠레 시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칠레 정부는 고집스럽지 않았고, 이내 요금인상안을 철회하였다. 불만이 사라지면 시위도 사라져야 했다. 하지만 칠레의 경우 요금인상안 철회로 시위가 잦아들지 않았다. 불평등이 시위의 원인이라고 지목되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은 그동안 칠레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고 강도 높은 개혁 추진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시위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와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요구하였다. 왜 시위대는 멈추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지하철 점거 고등학생들과의 인터뷰는 흥미롭다. 사실 칠레의 지하철 요금 인상은 고등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학생 요금의 인상은 인상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교통통신부 장관도 학생들이 인상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시위를 시작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은 달랐다. 시위를 주도했던 칠레 중고등학생 연맹의 대변인인 마르코 파우레는 그들의 시위가 "비참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고통" 그리고 "그들을 옥죄는 불평등한 시스템"에 분노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할 지하철이 이윤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여겨지는 현실도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가 겪고 있는 사회문제에 분노했고, 공동체의 삶을 위협하는 시장의 논리에 저항한 것이다. 45원의 요금인상이 철회되었다고 이러한 근본적인 불만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신자유주의는 흔히 경제정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논리가 삶을 지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경제정책 이상의 결과를 초래한다. 개인은 시장에서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존재로 전락하고, 가치 있는 삶은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삶으로 재해석된다. 공공의 영역은 부패와 무능의 영역으로 치부되고, 함께 무엇을 도모하는 것은 개인들이 경쟁하는 것에 비하여 능률이 떨어지는 구태가 된다. 나에게 이롭지 않은 인간관계는 청산의 대상이 되고, 나 또한 누군가에

게 청산 당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 혹독한 경쟁 속에서 나에게 흙수저를 물려준 가족이 원망스럽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인간이 본래 놀라울 정도로 사회적인 동물이고, 정서적으로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공동체를 떠나서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점을 잊게 만든다. 신자유주의가 만든 세상에서 인간은 고립되고 동시에 소외되며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병들게 된다.

신자유주의의 민낯을 무려 50여 년 경험한 칠레 시민들은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2019년 시위에 나섰다. 이 변화의 요구는 사회의 각 부문에서 터져 나왔다. 학생들은 교육 제도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삶을 복원하라고 요구하였고, 여성들은 성폭력과 차별로 여성의 삶이 파편화되는 것이 무자비한 시장의 논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칠레의 역사 속에서 늘 소외와 차별을 경험해왔던 원주민들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진 폭력과 배제를 활용하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폭로하였다. 효율적인 경제 발전이라는 핑계로 파괴되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환경운동가들의 주장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 의료, 노동, 성소수자, 연금수령자 등 다양한 집단들이 시위에 동참하였고, 이들의 주장이 어우러져 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중심에는 신자유주의와 함께 삶의 곳곳에 스며든 시장의 논리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칠레에서 태어난 신자유주의, 칠레에서 종말을 고하리라"는 그들의 구호는 이런 광범위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칠레의 사회개혁 요구 시위는 45원 지하철 요금인상안의 철회 정도로는 진정시킬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였다.

그렇다면 시장의 논리에 잠식당한 사회 특히 공동체를 복원하는 작업은 무엇을 통하여 가능할까? 칠레 시민들은 그 해답을 헌법 개정에서 찾았다. 칠레의 현 헌법은 칠레인들에게 피노체트 정권의 잔재를 상징한다. 1980년 피노체트 헌법은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이자 법학자였던 하이메 구스만이 주도하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헌법제정위원회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당시 이 헌법은 대통령이었던 피노체트의 정치적 영향력과 군부의 권력 그리고 보수정당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독소 조항이 포함된 헌법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민주 정부 집권 시기 동안 다양한 개정 절차를 거쳐 여러 독소 조항이 삭제 및 수정되었으나 여전히 칠레 시민들에게 이 헌법은 신자유주의를 칠레 사회에 이식시킨 피노체트를 상징한다. 이번 사회개혁 요구 시위를 통하여

피노체트 헌법을 완벽하게 대체할 새 헌법의 제정이야 말로 칠레 사회의 복원을 의미한다는 정치적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칠레 시민 사회의 개헌 요구는 따라서 법 개정 이상의 의미를 띤다. 그동안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에 의해 소외와 배제를 경험한 칠레 시민들은 헌법의 개정을 통해 칠레 사회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복원하고 소외와 배제의 문화를 극복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경제정책의 수정, 교육 정책의 변화, 연금 정책의 개혁 등 정책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세계관의 변화를 요구하였으니 개별 정책을 포기하는 정부의 항복 문서는 시위대의 마음을 얻기 어려웠다. 결국, 새로운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칠레 사회를 구성하고 다스리는 근본적인 원칙을 다시 세우자는 시위대의 의견은 칠레 시민들의 압도적 다수인 무려 78%의 찬성으로 현실이 되었다.

칠레의 사회개혁 요구 시위와 그 결론은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우리도 신자유주의를 사회가 움직이는 근간으로 삼은 지 무려 20여 년이 넘었다. 그동안 칠레와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수정은 이루어졌지만, 그 핵심이 바뀌지는 않았고, 그 결과 무한경쟁과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사회를 갖게 되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행복한가? 칠레의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 듯하다. 칠레는 그래서 그 근간을 바꾸자고 결심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헌법의 제정을 그 방식으로 선택하였다. 경제정책의 탈을 쓴 신자유주의를 법의 이름으로 극복하려는 매우 놀라운 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실험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2022년 9월 칠레의 시민들은 그렇게 원했던 칠레의 새 헌법안을 부결시켰다. 헌법안 부결의 소식은 전 세계에 타전되었고, 지나치게 급진적이었던 새 헌법안의 내용이 문제였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라틴아메리카에 그다지 관심은 없지만 이런 사안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 우리 언론도 좌파 정권의 실패를 부각하는 분석을 내놓았다. 칠레의 새 헌법안은 정말 지나치게 급진적이었을까? 헌법안을 부결시키자마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의 절대다수인 76%가 개헌을 여전히 요구하는 현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칠레의 신헌법 제정 절차를 법 개정이 아니라 사회 변혁의 시도로 읽는다면 답을 구할 수 있을 듯하다.

다음 글에서는 부결된 개헌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개헌안 부결 이후 칠레 사회의 대응을 살펴

보고자 한다. 무려 3회에 걸쳐 칠레의 개헌 노력을 살펴보는 것이 다소 지루한 일일 수 있으나, 헌법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려는 칠레 사회의 실험은 너무나 중요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또한 지나칠 수 없으니 인내심을 갖고 살펴볼 이유는 충분했으면 한다.

[지원사업은 진행중]

로힝야가 '스스로 집단학살을 기록한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

사단법인 아디

▲ 로힝야 생존자 미팅

코로나 이후 2년 6개월만에 출장을 다녀온 방글라데시 로힝야 캠프. 지난 5년간 함께 해 온 반가운 얼굴을 보니 오랜 친구를 만나는 느낌이다.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는 그들의 얼굴에는 모처럼 수줍은 미소가 만연하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캠프 생활을 들었다. 집단학살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지내는 캠프에는 철장이 둘러쳐졌다. 출입 통제까지 받다 보니 난민들은 캠프가 열린 감옥이나 다름없다며, 미얀마 상황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구호단체

의 식량 배급으로 근근히 연명하고 있지만, 생활은 점점 더 곤궁해지고 있다. 해마다 찾아오는 태풍과 홍수 그리고 계속되는 빈번한 화재, 인신매매와 마약 밀매 문제까지...점점 더 열악해지는 캠프 환경 속에서 난민들은 벌써 5년 넘게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심리적으로도 점차 피폐해지고 있다. 이제는 범죄집단이 된 무장단체들이 캠프 안에서 세력 다툼까지 하면서 난민들은 살해 위협, 피살, 금전 갈취 등을 당하며 그야말로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깊은 한숨 사이로 이들은 "국제재판절차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언제쯤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었다.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음이 죄송했다.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계속 견뎌내고 준비해야 한다는 말 외에는 더 나은 위로를 할 수 없는 현실이 원망스럽다. 그리고 두 달 뒤 한 분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 분의 마지막 모습은 영정사진이 되어 마음에 새겨졌다.

오랜만에 대면한 로힝야 생존자들로부터 들은 말은 고맙다는 것이었다. 잊지 않고 찾아 주고, 한결같이 함께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일해주는 '진실의 힘'이, '광주인권평화재단'이, '아디'가 감사하단다. 지난 5년간 세 단체는 로힝야 집단학살 기록사업에 진심이었다. 40개 마을에서 1,000명 넘게 인터뷰하고 기록을 정리, 보전하고 있다. 2022년에만 5개 마을의 약 120명을 인터뷰했다. 2018년부터 함께 해 온 6명의 로힝야 기록활동가가 주도한 성과다. 집단학살로 시민사회가 파괴됐고, 국제사회의 정의 프로세스는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또 언제 가능할 지조차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했기에 누군가는 기록을 시작해야 했다. 소외 없이 가급적 모든 피해 마을의 증언과 증거를 기록해 하나의 실체적 진실을 이루도록 하는 것도 중요했다. 하지만 유엔과 국제 엔지오들은 마을별 접근과 기록에는 관심이 없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재판절차조차도 특정 소수의 심각한 케이스만 다루고 있는 상황이라 200여개 마을에서 발생한 집단학살 기록은 요원한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세 단체가 이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 교육권 보고서

캠프에서의 기록작업은 이제는 모두 로힝야 출신 기록활동가들이 수행하고 있다. 지난 60년간 박해와 집단학살을 받아온 피해자이면서 생존자인 6인. 이들은 대학교육을 받은 엘리트이지만 인터

뷰 활동에 필요한 기초 소양이 처음부터 준비되었던 것은 아니다. 인권개념, 인터뷰 이론과 요령 실습, 증거수집의 원칙 및 기록 방식, GPS를 통한 위치정보 파악방법, 인터뷰 질문지 작성, 인터뷰 대상자 선정 방법, 증언 녹취록 작업 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인 훈련을 해 왔다. 2021년부터는 '로힝야인권센터'라는 이름으로 반지하조직처럼 활동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고, 오히려 신변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2년전 비슷한 활동을 했던 로힝야 활동가가 총격을 받아 살해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기록 활동을 하는 데 위협요소가 많다. 감시를 항상 염려해야 하고, 휴대폰, 노트북 등 검열과 수색에 대비해 보안에 철저히 신경쓰고 있다.

◀ 연명 캠페인 자료

진실의 힘과 함께 한 2022년은 두 가지 이유로 특별했다. 첫째로 캠프 내 현재 인권상황에 대해 기록하고 캠페인을 벌였던 점이다. 캠프 내 교육권 실태를 조사하면서 활동가들은 설문조사지를 직접 작성하고 1,0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또 심층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고, 교사, 부모, 아동 등 총 45명을 인터뷰하고 녹취록을 작성했다. 아디와 공동으로 이를 분석해 보고서를 집필해 발행했다. 조사 보고서에서 학력 인증이 안되고 있는 캠프 내 교육의 문제, 교사의 낮은 질적 수준, 배제되고 있는 여학생 교육기회 제공의 필요성, 국제적인 교육지원 기금의 심각한 부족 문제를 다뤘다. 나아가 현지에서 캠프 내 로힝야 난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청원캠페인을 벌여 약 18,000여명이 참여한 성과를 냈고, 이를 바탕으로 유엔특별절차, 방글라데시 정부, 미얀마 NUG 등에 진정 및 공식서한을 보내 개선을 촉구했다. 일부 국제언론에 관련 보도자료를 로힝야 인권센터 명의로 발송했다.

두번째는 여전히 심각한 미얀마 라카인주의 로힝야 인권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2022년에는 쿠데타 세력과 아라칸군의 충돌로 인해 로힝야들은 이중의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힝야 인권실태는 국제사회와 언론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다. 최신의 소식이 외부에 잘 공유되지 않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많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인권상황 기록 활동은 로힝야 거주지역에 살고 있는 자원활동가 10명이 수행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모니터링을 상시 수행했고 브리프를 발간하여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전달했다. 개별 인권 사안 55건에 대해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외부와 공유했다.

아직 갈 길은 멀다. 한계도 많다. 로힝야 기록활동가들의 역량은 더 증대되어야 한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언과 지원이 필요하고, 캠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활동비, 운영비 등 조직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도록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022년 교육권 실태조사 등의 과정에서 했던 것처럼 먼저 스스로 토론하여 결정하게 하고, 이 과정에 개입해서 다시 한 단계 질적 수준을 높여내고, 실행도 함께 하는 긴 프로세스가 여전히 필요하다. 성장은 더디다. 이들의 수준과 국제사회에서 신뢰받을 수준의 방법론 설정, 이행, 결과물 도출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작업을 더 해야 한다.

로힝야 활동가들에게 기록활동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일이다. 처지도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더 절실하다. 이들은 그렇기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도, 캠프의 상황이 열악하더라도, 충분한지 못한 지원을 받으면서도, 무엇보다 자신들의 업이자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다. 캠프 내 사람들의 바람과 다르게 세상은 다시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희망을 쌓았다. 6인의 기록활동가들이 희망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기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고, 5년간 해온 작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앞으로 5년은 이제 성과를 바탕으로 실력과 자신감을 키워, 점차 독립을 준비해 가면 된다. 서두를 이유는 없다. 다만 그 자리에 함께 해주면 된다. 이게 가장 어렵다. 그래서 두려운데, 혼자가 아니라면 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자원활동가를 소개합니다]

많은 '그럼에도'를 유념하며

배성윤(서울대 국어국문과3학년)

사실 그 너머의 진실

소설을 규정하는 완전무결한 정의는 있을 순 없겠지만, 소설의 특징을 꼽아본다면 흔히들 허구성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설이란 꾸며내거나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설의 허구성은 무엇보다도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설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허구의 세계를 끌어들입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말인가요. 하지만 온

갖 갈등과 모순이 얽히고 설킨 것이 세상사임을 생각해보면 소설만큼 그 존재부터 이 세상을 충실히 반영하는 장르도 없을 것입니다. 허구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그 반대로 진실을 곱씹어 보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진실과 사실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건지, 머릿속이 혼란으로 엉킵니다. 여기서 감히 진실과 사실에 대해 논하자면, 진실에 다가서는 것은 사실과 사실의 일개의 면면을 넘어서 그것들이 관계하여 짜여지는 구조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일이라고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면적입니다. 나에게는 진저리칠 정도로 끔찍한 놈이 다른 이에게는 끔찍이 아끼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끔찍한 놈이라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끔찍이 아낌받는 사람이라는 것도 각각이 모두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진면모는 무엇인가요.

진실은 사실을 넘어설 때 비로소 다가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역설적이게도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는 진실을 구하는 작업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가령, 현실에는 부랑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랑인이라는 명목하에 형제복지원에 감금당한 이들은 모두 부랑인이었던 가요? 애초에 부랑인은 사회로부터 강제로 격리되어 자유를 박탈당할 수도 있음에 마땅한 존재인가요? 그 당시 국가는 국민을 어떠한 존재로 여겼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자행할 수 있었으며, 여러분은 국가 폭력으로 인한 비극이 현시대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진실의 힘에서 자원활동을 하면서 부끄럽게도 형제복지원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과 관련해서 맡은 제 주된 업무는 언론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미지를 정리하고 출처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지를 정리하면서 언론에서 사용하는 주된 이미지들이 박인근 원장이 출판한 '형제복지원 운영자료집'에 의존하고 있고, 형제복지원의 모습을 담은 영상 자료는 대부분 그 출처가 형제 복지원 홍보 영화인 '종점 손님들'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라도 남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그때의 강제 수용 생활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자료들이 형제복지원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한 것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그래서 그 자체의 한계를 가진다는 점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리 오래지 않은 시절에 국가는 형제복지원의 존재를 묵인함으로써 개인의 일상을 해쳤고, 그로 인해 개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리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관한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과 사과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료를 정리하면서, 여전히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 규명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여전히 힘쓰는 여러 노력들을 접하며 희망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에 굴하지 않고 본인의 삶을 꾸려 나가고, 국가 폭력의 재발 방지라는 더 큰 차원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피해자분들과, 또 그분들을 지지하고 법률 구조 지원을 통해 "인간의 삶은 폭력보다 강하다"라는 믿음을 실천하는 재단법인 진실의 힘의 활동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온과 불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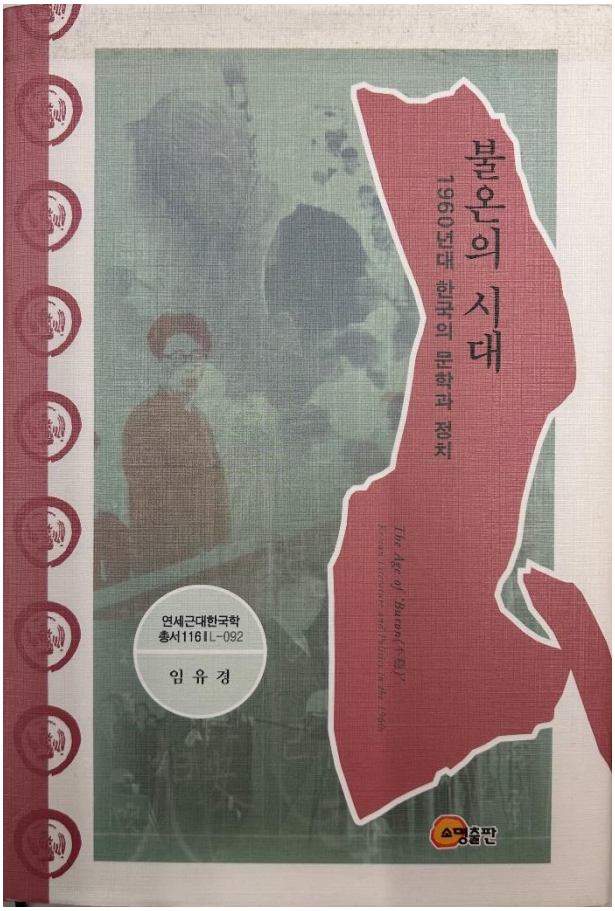
제가 자원활동에서 맡아 진행중에 있는 일로는 박동운 선생님의 재판 기록 스캔과 형제복지원 피해자 분의 인터뷰를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를 보며 국가 폭력의 피해라는 공통점 이외에도 이후 삶에 대한 비슷한 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 폭력의 피해 이후에도 존재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인 낙인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과 가정이 피해의 직격타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제3자인 제 안에서도 멋대로 통탄스러움이 올라올 정도인데, 당사자들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박동운 선생님은 한 인터뷰에서 억울한 옥고를 치루신 뒤 고향에 갔을 때 행하지도 않은 간첩 행위의 누명이 여전히 존재함을 말씀하셨고, 형제복지원 사건의 어느 피해자 분 또한 인터뷰에서 부랑인이라는 낙인이 두려워 사회가 형제복지원이라는 사건의 실체를 받아들일 수 있기 전까지 이 사실을 숨겼다고 하셨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분은 최근에는 그래도 점점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느끼며 이제는 피해 사실을 당당히 밝힐 수 있다는 말씀에서 피해자들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대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실의 힘 활동은 제 안온했던 일상을 되돌아보고 여러 국가 폭력 피해의 케이스를 통해 폭력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저의 무딘 감각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의 일상이 안온할지라도 여전히 국가 폭력이 어느 한편에서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보탤 수 있는 힘 중 하나는 피해자분들이 자신의 피해에 대해 편히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러한 피해자 분들의 용기를 지지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러한 국가 폭력의 피해 사례를 접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맡으면서 이런 일들이 감히 제 스스로 제게서 다양한 경험이 되었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보람 됐다고 말하기보다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 무심했던 지난 날들에 대한 부끄러움이 가장 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의 안온한 일상을 위해서라면 불온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불온이 되고자 하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후기]

강의 <불온의 시대>를 듣고나서

장미나(고려대 물리학과)



불온(不穩)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온당하지 않음' 혹은 '사상이나 태도 따위가 통치 권력이나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질이 있음'과 같다. 초록 검색창에 '불온'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위와 같은 사전적의미와 '불온 서적', '사상 불온혐의'와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본 강의의 연사이자 "불온의 시대"의 저자인 임유경 교수는 불온이라는 단어가 정부의 관제 문헌이나 언론 매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술장과 일상 차원에서도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고 언어를 다루는 주체에 따라서 사용 의도가 달라지며 말의 기능과 효과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보고 특정 단어가 살아남는 그 과정을 추적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박사과정 논문 주제로 선택 하셨다고 합니다. 본 강연 이후, 이러한 교수님의 관점을 빌려 또 다른 키워드 '부랑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 복지원 사건의 중심에 있는 단어 '부랑자'는 그 시대 권력의 주체의 관점에서 '불온'한 자들에 대한 탄압을 대외적으로 정당화하고 일반화 하기 위해 쓰여진 또 다른 키워드가 아닐까 하고 질문해 봅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서 '불온'이라는 단어의 용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용례의 구분은 [상태], [사상], [행위], [주체], [매체]로 구분이 가능한데 불온한 상태, 불온한 사상, 불온적 행위, 불온한 주체, 불온한 매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중 불온한 주체로서 묘사되는 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부랑자' 라는 또 다른 프레임으로 포장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사님은 실제로 60년대부터 실제로 처분과 기소가 이루어진 안녕 질서 방해와 풍속괴란죄 제21조 1907년의 신문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불온생산체계"가 60년대부터 재구조화 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419 김주열의 죽음과 전태일 노동자의 죽음은 60년대의 혁명과 죽음 사이를 보여주며 체제와 가난 사이의 권력 작용을 보이는데 이 둘은 언론을 통해 불온한 주체로서 낙인 찍히며 시대의 불온 표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권력은 언론을 통해 내러티브를 형성하는데, 북한에 대한 표상의 변천 과정에서도 이렇게 키워드를 통한 이야기 형성을 통

해 원하는 사상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0년대의 북한은 적으로 인식되지만 60년대엔 지옥, 80년대는 빈곤과 기아, 90년대는 악의 축 혹은 불량국가, 그리고 2000년대에 와서는 싸울 가치도 없이 표상의 힘을 잃어가는 듯이 묘사됩니다. 이처럼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권력을 표방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사용은 곧 권력의 작용으로 권력의 관계성을 관찰해 볼 수 있음을 이야기 하십니다. 60년대를 본다면 빈곤과 체제 혹은 외설과 불온이라고 하는 단어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만들게 되고 담화와 연설의 생산이나 언론을 통해 이야기들을 생산해 내며 언어를 통한 통제와 검역 망이 형성되는데 이는 미셸 푸코가 이야기하는 성과 이념에 대한 통제와 같습니다. 외설과 불온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법적 토대가 형성되고 이념이 형성이 됨에 따라 사회의 주요 통제 원칙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권력 작용은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 거론되는 미시적으로 내재화된 권력망의 작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빈곤이라는 범주안에서 '부랑자'라는 키워드를 통해 주체를 명확히 하고 통제와 탄압의 정당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강의 끝자락에서 김수영 시인의 말, "문화가 불온 하지 않다면 문화가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 말은 과연 불온하다는 것이 과연 부정적이기만 한 일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와 같이 빈곤하여 길거리를 배회하는 부랑자에 대한 통제는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한 공간으로 모아 다시금 질서를 성립시킨다는 내러티브가 형성되며 모두를 설득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이나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군부 정권은 사회질서를 해치는 자들이라는 '부랑자', '홈리스', '거지'와 같은 이름표를 통해 통치에 순응하지 않는 자(불온한 주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제도화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수영 시인의 말처럼 과연 불온한 것들이 꼭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고 통제되어야 하는 것인지 과한 질서와 통제는 오히려 우리 사회를 아프게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 사유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키워드를 통한 내러티브 형성으로 계속되는 권력 주체자들의 일방적인 정당화는 앞으로도 여러 불온함으로 견제 되어야 만 할 것 입니다.

<안내>

2022 년에도 진실의 힘을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2 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안내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발급합니다. 2023 년 1 월 중순 이후부터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홈텍스 발행이 아니라 우편, 이메일, 팩스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시길 원하신다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진실의 힘 사무국 문의: 전화 02-741-6260 이메일 truth@truthfoundation.or.kr

■ 기부금 합산기간

2022 년 1 월 1 일 ~ 2022 년 12 월 31 일

■ 기부금 공제기준

지정기부금코드 40, 기부금 1 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기부금 1 천만원 초과분의 경우 3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2021 년 기부금은 코로나 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번호(13 자리) 전체를 알려주신 경우, 더 필요한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홈텍스 이외의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는 경우, 주소, 이메일 등을 추가로 알려주세요.

☞ 기부금영수증을 본인이 아닌 다른 명의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 81 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자녀나 가족 이름으로 후원을 한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어떻게 받나요?

후원해주신 자녀 혹은 가족분의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 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인 경우에는 명의 변경 없이 합산하여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